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6년 7월 동향 (제873호)

- ▶ 6월 대비 5.3% 감소(1,362,342건)
- ▶ 금융위, 인천, 경북 울릉군, 경기도교육청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 8월 민원주의보로 '전기차 충전' 선정,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및 공급 확대 등 제시

국민의 소리

No. 873

월간 동향

2026년 7월

01 민원 동향(7월)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02 기관별 동향(7월)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03 민원주의보(7월) : 전기차 충전 10

01 | 민원 동향(7월)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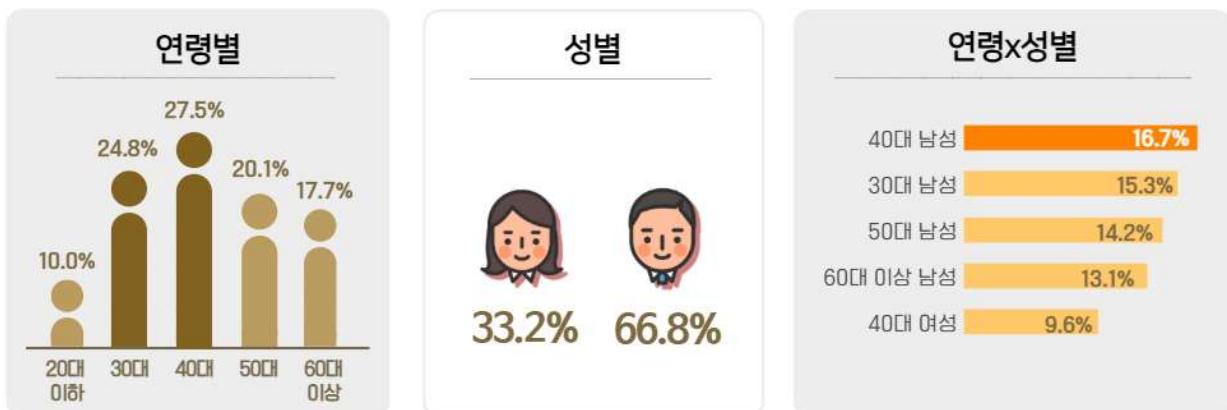
- 2026년 7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62,342건
- 전월(1,439,003건) 대비 5.3% 감소, 전년 동월(1,398,198건) 대비 2.6% 감소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서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6.8.3. 09시)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27.5%) 및 30대(24.8%), 성별로는 남성(66.8%)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16.7%), 30대 남성(15.3%), 50대 남성(14.2%)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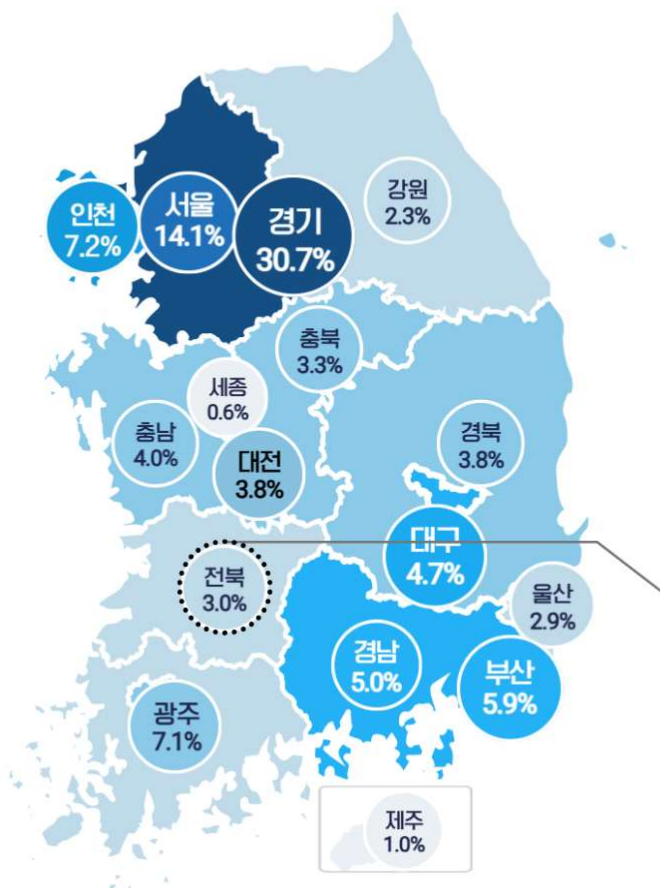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199,139건 대상

지역별 현황

- 경기 30.7%(365,140건), 서울 14.7%(175,495건), 인천 7.2%(86,178건), 광주 7.1%(84,237건), 부산 5.9%(70,825건) 등의 순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6.3%↑)

* 횡단보도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

7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전북특별자치도 민원발생 현황



※ 신청지역이 확인된 1,190,933건 대상으로, 민원의 처리기관 기준이 아닌, 신청지역 기준임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0.4%)가 가장 많고, 행정·안전(7.8%), 도로(7.3%), 환경(3.5%), 산업·통상(2.9%), 주택·건축(2.6%)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행정·안전	도로	환경	산업·통상	주택·건축	경찰·검찰· 법원	보건	
60.4%	7.8%	7.3%	3.5%	2.9%	2.6%	2.1%	2.1%	
수자원	재정	교육	문화	노동	방송통신	도시	농림·축산	
1.4%	1.2%	0.9%	0.9%	0.8%	0.8%	0.7%	0.6%	
복지	국방	관광	체육	과학기술	세무	외무통일	해양수산	우정
0.6%	0.6%	0.6%	0.5%	0.5%	0.4%	0.3%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314,951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사업 해외 매각 관련 기술 유출 우려 등 **과학기술** 분야 증가



과학기술
14.2% ↑



수자원
6.8% ↑



경찰·검찰·법원
5.5% ↑



국방
0.8% ↑



교육
0.7% ↑

감 소



재정
44.8% ↓



복지
29.3% ↓



보건
23.8% ↓



환경
15.9% ↓



주택·건축
13.9% ↓

주요 민원키워드

- 7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 단속 요구, 재개발 추진, 쓰레기 무단투기, 데이터센터 건립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위례삼동선
변전소 신설 반대
의료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가로등 정비
재개발 추진
도로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교통법규 위반
버스노선
데이터센터 건립
인천2호선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양은평선
위례선 트램
포트홀 정비
제2경인선
가계대출 총량관리
해충 방역

〈일반〉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광고물	1	불법주정차*
2	재개발 추진	2	도로시설물 정비
3	쓰레기 무단투기	3	고양은평선
4	데이터센터 건립	4	교통법규 위반차량
5	고유가 피해지원금	5	버스노선
6	의료법 위반	6	포트홀 정비
7	가로등 정비	7	위례선 트램
8	변전소 신설 반대	8	제2경인선
9	해충 방역	9	인천2호선
10	가계대출 총량관리	10	위례삼동선

* 장애인 전용구역, 친환경차 전용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불법 주정차 키워드 포함

[신규 및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일반 ⑩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대출 축소·중단 문제 대책 마련 요청

**도로
교통** ⑦ 정거장 주변 정비 등 위례선 트램 개통 관련 주민 건의 사항

중앙행정기관

- 7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182,300건으로 전월 대비 2.0% 증가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법무부 등, 감소한 기관은 복지부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경찰청	52,211	49,556	-5.1%
국토부	36,736	37,208	1.3%
노동부	15,014	12,697	-15.4%
법무부	3,066	8,575	179.7%
국민권익위	5,873	7,847	33.6%
국방부	7,446	7,136	-4.2%
식약처	5,191	5,728	10.3%
복지부	8,011	4,961	-38.1%
대검찰청	4,755	4,451	-6.4%
기후부	2,898	4,349	50.1%
과기정통부	4,431	4,041	-8.8%
공정위	4,367	3,830	-12.3%
행안부	3,345	3,562	6.5%
국세청	3,421	3,054	-10.7%
교육부	2,644	2,258	-14.6%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금융위	702	2,097	198.7%
법무부	3,066	8,575	179.7%
개보위	996	1,822	82.9%
총리비서실	414	644	55.6%
해경청	192	293	52.6%
통일부	91	137	50.6%
기후부	2,898	4,349	50.1%
산업부	584	868	48.6%
기획처	358	509	42.2%
국민권익위	5,873	7,847	33.6%
데이터처	96	127	32.3%
공수처	637	820	28.7%
감사원	179	228	27.4%
산림청	619	777	25.5%
소방청	1,142	1,431	25.3%

※ 7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금융위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대출 축소·중단 문제 대책 마련 요청 등(2,097건)
법무부	○○구치소 수감자 외부 진료 허용 요구 등(8,575건)
개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신청 등(4,409건)

1) '26.8.3. 09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지방정부(광역)

- 7월 지방정부(광역) 민원은 총 79,474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
-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울산, 인천, 충북 등 13개, 감소한 시·도는 제주 등 3개

[지방정부(광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서울	40,672	42,715	5.0%	대구	1,298	1,429	10.1%
세종	6,434	5,935	-7.8%	충남	993	1,093	10.1%
인천	3,591	5,640	57.1%	충북	477	607	27.3%
대전	5,175	5,460	5.5%	제주	684	605	-11.6%
경기	4,831	5,054	4.6%	전북	545	598	9.7%
광주	3,275	3,625	10.7%	경남	444	552	24.3%
부산	2,582	2,751	6.6%	강원	518	551	6.4%
울산	1,428	2,385	67.0%	경북	514	474	-7.8%

※ 7월 민원 발생량 순

[주요 민원 증가 사례]

인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 요구 등(5,640건)

울산

▽▽재개발 수용재결 절차 조속 추진 요구 등(2,385건)

충북

도로변 제초 요구 등(607건)

지방정부(기초)

- 7월 지방정부(기초) 민원은 총 1,038,873건으로 전월 대비 6.7%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증가한 지방정부는 없음,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정부는 경북 울릉군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33,671	30,175	-10.4
경기 성남시	27,064	24,797	-8.4
경기 화성시	24,411	23,091	-5.4
충북 청주시	23,417	21,105	-9.9
경기 용인시	20,166	19,427	-3.7
경기 안산시	19,408	19,214	-1.0
경남 창원시	18,971	18,911	-0.3
경기 고양시	17,829	17,323	-2.8
충남 천안시	18,535	17,004	-8.3
경기 평택시	18,778	16,637	-11.4
경기 부천시	15,549	15,029	-3.3
서울 강서구	18,003	14,519	-19.4
서울 마포구	17,566	14,479	-17.6
서울 송파구	18,463	14,465	-21.7
서울 서초구	15,470	13,991	-9.6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경북 울릉군	75	130	73.3%
경남 합천군	246	355	44.3%
전북 고창군	322	454	41.0%
강원 고성군	423	573	35.5%
강원 정선군	335	442	31.9%
경북 영덕군	354	465	31.4%
전북 김제시	972	1,234	27.0%
경북 청송군	96	118	22.9%
경북 성주군	389	472	21.3%
전북 임실군	285	344	20.7%
강원 양양군	531	637	20.0%
경북 봉화군	187	224	19.8%
대구 수성구	8,451	9,917	17.4%
충북 옥천군	618	705	14.1%
강원 평창군	381	434	13.9%

※ 7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경북 울릉군	★★ 호텔 준공 허가 요구 등(130건)
경남 합천군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신고 등(355건)
전북 고창군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등(454건)

교육청

- 7월 교육청 민원은 총 10,920건으로 전월 대비 2.6% 감소
-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제주, 전북 등 6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경북, 충북 등 10개 기관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경기	3,614	4,478	23.9%	전북	244	307	25.8%
서울	2,628	1,998	-24.0%	대전	285	284	-0.4%
광주	544	568	4.4%	대구	339	283	-16.5%
부산	604	544	-9.9%	울산	194	209	7.7%
경남	411	452	10.0%	충북	276	202	-26.8%
인천	554	417	-24.7%	강원	207	195	-5.8%
경북	760	398	-47.6%	제주	110	168	52.7%
충남	344	323	-6.1%	세종	97	94	-3.1%

※ 7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경기교육청 ○○○지구 신설 초등학교 입주 시기 개교 촉구 등(4,478건)

전북교육청 늘봄지원실장 승진가산점 소급 적용 배제 요구 등(307건)

제주교육청 ☆☆☆초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대응 요구 등(168건)

공공기관 등

- 7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총 50,672건으로 전월 대비 17.6% 감소
- 한국도로공사, 금융감독원 등의 민원이 전월 대비 증가, 감소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3,576	5,173	-61.9%
금융감독원	4,214	4,599	9.1%
한국전력공사	3,637	3,869	6.4%
한국소비자원	2,705	2,664	-1.5%
법원행정처	1,751	1,603	-8.5%
한국산업인력공단	2,605	1,591	-38.9%
국가철도공단	1,678	1,290	-23.1%
한국철도공사	1,073	1,164	8.5%
한국도로공사	973	1,142	17.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46	1,140	9.0%
국민건강보험공단	988	938	-5.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13	802	12.5%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118	800	-2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85	790	-10.7%
한국제품안전관리원	780	785	0.6%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6.6월	'26.7월	증감률
서민금융진흥원	113	259	129.2%
한국부동산원	206	423	105.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3	366	89.6%
한국수자원공사	282	425	50.7%
한국자산관리공사	338	461	36.4%
인천도시공사	187	255	36.4%
헌법재판소	119	161	35.3%
화성도시공사	142	180	26.8%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66	324	21.8%
농협중앙회	242	289	19.4%
한국개발연구원	270	319	18.2%
한국도로공사	973	1,142	17.4%
근로복지공단	595	692	16.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48	170	14.9%
한국도로교통공단	116	133	14.7%

※ 7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부적격 이의신청 등(259건)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센터 관련 위탁운영 사업 공익성 검토 요청 등(423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미지정 제품 판매 신고 등(366건)

03 | 민원주의보(8월) : 전기차 충전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충전구역 이용 위반 신고, 충전시설 확충 요구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국민 최소화 방안 검토를 위한 민원 분석 및 주의보 실시

*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 684,244('24년) → 899,101('25년), 전년 대비 31.4% 증가(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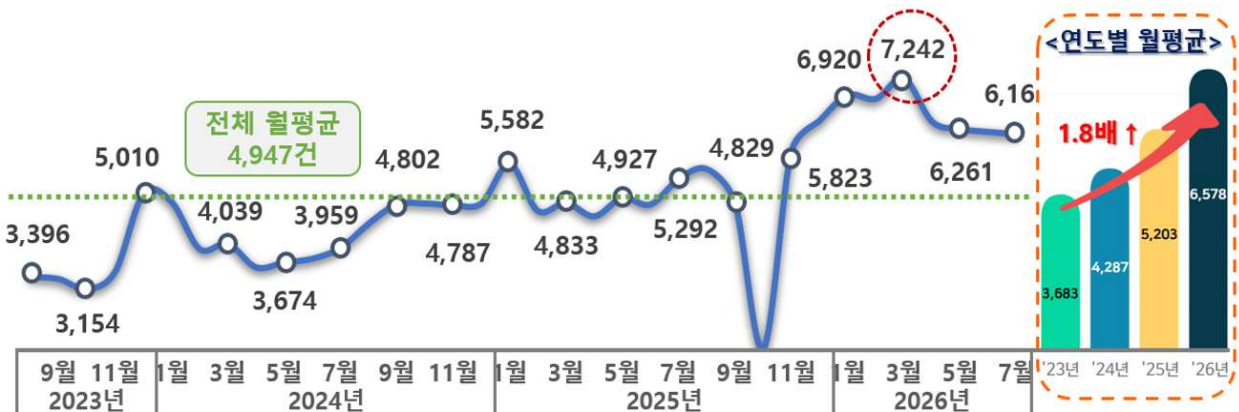
1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최근 3년간('23.8월~'26.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총 173,305건(월평균 4,947건)

- '23년 8월 이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6년 3월이 7,242건으로 가장 많음

* '26년 '전기차 충전' 관련 월평균 민원은 6,578건으로, '23년(월평균 3,683건) 대비 1.8배 증가

< 최근 3년간('23.8월~'26.7월) 월평균 민원 추이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등 운영 중단('25.9.26~'10.27.)으로 해당 기간 민원 미접수

○ (신청인) 남성(82.3%)이 여성(17.7%) 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5.6%), 40대(32.1%), 50대(14.8%), 20대 이하(11.1%)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23,427건(전체의 13.5%), 연령 정보 확인 가능 21,168건(전체의 12.2%) 대상

○ (신청지역) 경기(33.6%), 서울(13.8%), 인천(7.2%), 경남(5.4%)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64,760건(전체의 95.1%), 민원의 처리기준이 아닌, 신청지역 기준임

○ (처리기관) 경기도(30.6%), 서울시(16.6%), 인천시(6.6%), 경남도(4.9%) 등의 순

2 개선 방향

현재	개선 방향
▲ (충전구역 이용 위반)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이용 방해 사례 증가 - 전기차 전용 구역 일반차량 주차 신고 및 단속 요구 증가 - 충전 완료 후 규정*을 초과하여 장기 주차한 전기차 단속 요구 - 미충전 전기차량 주차에 대한 단속 요구 증가 *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 (충전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시설물 고장 및 오류, 충전기 부족 등 불편 사례 증가 - 충전기 고장 방치, 충전 카드 인식 오류로 인한 불편 호소 - 주거지 인근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확충 요구 - 고속도로 휴게소 장시간 충전 대기 불편으로 충전기 추가 설치 요구 ▲ (충전 관련 위반 신고) 무단 충전 및 고의 충전 방해, 충전기 훼손 사례 증가 - 공용전기 등을 이용한 부적정 충전 행위 신고 - 충전시설 내 무단 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및 충전시설 고의 훼손 단속 요구	▲ (충전 구역 관리 강화) 불법 주차 및 이용 방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강화 -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등 중점 관리 - 충전 구역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 - 충전 필요 차량 충전시설 우선 이용 방안 마련 검토 ▲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충전시설 관리 강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검토 - 충전시설 설치 유지·보수 체계 운영 내실화 - 충전 기반 시설 부족 지역 충전기 설치 지원 등 검토 - 휴게소 등 수요조사·분석을 통한 충전시설 확충 검토 ▲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 강화)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 활동 강화 - 무단 충전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단속 강화 - 위반행위 다발 지역 집중 단속 및 경고문 설치, 현장 계도 강화

3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전기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신고]

- ㉠공영주차장 충전 구역 두 곳 모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방문 단속 요청 합니다.('26.4.)
- 구 체육관 전기차 충전 구역 3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기차 충전을 못하고 있으니 바로 단속 요청합니다.('23.9)
- 일주일 넘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24.4.)

[충전 시설 이용 방해 신고]

- 공영주차장 지하 2층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도 하지 않는 전기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충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 요청합니다.('26.3.)
- 군에서 운용하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은 이동 주차하여 다른 차량도 충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하지도 않는 차량이 장기간 충전시설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3.10.)
- ♡공영주차장에 충전을 완료 해놓고 반나절 이상 상습적으로 빠지 않는 차가 있어서 신고합니다. 안내판이나 현수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24.7.)
- 전기차가 충전도 하지 않고 충전 구역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25.8.)

[충전기 고장 및 카드인식 오류 등 불만]

- ♡야외주차장 전기차 완속충전기 2기의 전기차 충전카드 인식이 안되어 충전 이 되지 않으니 점검 부탁드립니다.('23.11.)
-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기가 몇 년째 고장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인 만큼 빠른 수리 바랍니다 ('26.4.)
-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를 했지만 2개월 넘게 방치 중입니다. 업체에 계속 얘기해도 접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수개월째 A/S도 안되는 업체를 바꾸거나 시청 담당자분이 해결해줬으면 합니다.('24.12.)
- 여행, 출장 등으로 휴게소 충전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고장난 기계도 많고 자리도 부족하여 장시간 대기를 해야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일부 휴게소만 그러한게 아니니, 전국적으로 점검과 개선을 시급히 요청합니다.('26.7.)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 등 요구]

- ♣♣동에 전기차 충전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전기 탑차를 타고 있는데 멀리 충전시키고 다른 차를 타고 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늘려주세요!('23.8.)
-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3대가 있습니다. ◇◇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 충전소는 여기뿐입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25.1.)
- 충전 구역의 규격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24.7.)
- ▶▶휴게소는 총 6대의 충전기가 있지만 부족하여 여러 대가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휴게소는 앞뒤에 휴게소가 멀어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충전기를 늘려주세요.('26.2.)

[불법 충전 행위 신고]

-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개인 컨버터로 전기차 도둑 충전하는 차량 신고합니다. 상습적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층에서 충전했습니다.('25.12.)
- 공공 전주에 설치된 분전함을 무단으로 열고,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합니다. 분전함 무단 개방으로 인한 누전·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 주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습니다.('25.12.)
- 등산 중 피뢰침과 CCTV설비에 있는 전기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충전하기 위해 공용전기를 사적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속해주세요('23.11.)

[충전 방해·훼손 행위 신고]

-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에 무단 적치물 등을 이용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25.12.)
- 충전소 전체에 그물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충전소 진입 불가로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공영구역을 개인 작업장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 바랍니다.('24.4.)
- 전기차충전기 선을 매달아 놓는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신고합니다.('24.11.)
- 바닥 도색 및 구획선 등 전용구역 표시가 심하게 훼손되어 일반 차량이 상습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26.3.)

알림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반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7월)	운영성 주무관	044-200-7330
02. 기관별 동향(7월)		
03. 민원주의보(8월)		
시스템 이용 문의	HelpDesk	070-4108-3625